

트럼프·시진핑, 동시 국민 방한... '세기의美中 담판' 나올까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나란히 국민 방한하게 되면서 전세계 시선이 경주로 향하고 있다. 세계 패권을 다투는 두 정상이 6년 만에 대면하는 장면이 한국에서 연출되는 것이다. 더욱이 무역분쟁 중인 양국이 정상간 담판으로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26일 백악관이 공개한 일정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일본 방문 일정을 거쳐 오는 29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 1박2일의 방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APEC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같은 날 저녁에는 정상들의 실무만찬에 참석한다.

이번 방한 기간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첫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전 시 주석과 양자회담에 참여한 뒤 당일 워싱턴DC로 출발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본행사엔 불참하게 됐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방한한다. 시 주석은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뒤 다음날부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내년 APEC 의장국으로, 회담 말미에 이 대통령으로부터 의장직을 인계받게 된다. 1일에는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후 시 주석과 처음 만나는 장면이 경주 APEC 계기에 연출되면서 APEC '흥행'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두 정상의 마지막 대면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였다. 미·중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찾은 것도 지난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6개월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트럼프 29~30일, 시진핑 30~11월1일 국민 방한
두 정상 2019년 이후 6년만 대면... 30일 정상회담
미중 무역 긴장 고조 속 돌파구 마련할지 주목
장소도 관심... 부산 김해공항 공공기지 유력 거론

양국 정상은 모두 '국민 방한' 형태로 방한한다. 외국 정상의 방문에는 '국빈 방문'과 '공식 방문', '실무 방문' 등 여러 형식이 있는데 그 중 국빈 방문이 가장 격이 높다. 의장대 사열, 환영식, 국빈 만찬 등 최고 수준의 의전이 제공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시 주석은 내달 1일에 국민 방한에 따른 일정이 진행될 예정인데, 미중 정상이 지방에서 국빈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에 지방 상황에 따라 다소 일정은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최근 미중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 이뤄질 두 정상 간의 담판이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붙을 높은 상대. 미국은 중국에 대한 소프트웨어 수출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회담에선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뿐 아니라 미국산 대두 수출, 핵 군축 등 다양한 범위의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취재진에 "시 주석과 상당히 긴 회담이 예정돼 있다"라고 말해 주목도를 높였다. 그는 "우리는 함께 많은 문제와 의문, 막대한 자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며 "최소한 희토류 문제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질 것이다. 관세가 희토류보다 더욱 강하다"고 했다. 미중 갈등이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이번 회담을 통해 긴장이 완화될 지 시선이 모인다.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장소도 관심사다. 보안 측면에서 부산 김해국제공항 공공기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APEC을 통해 "미국과는 역대 최단 기간 내 정상간 상호 방문을 완성하고 11년 만에 중국 정상의 국민 방문 완성을 통한 관계를 복원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광주)
광주전남언론포럼과 지역 현안 논의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광주)와 지역 언론계가 머리를 맞대고 광주, 전남의 구조적 문제와 현안 여론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 위기 ▲기업 유치를 가로막는 에너지 비용 구조의 불합리성 ▲농업의 구조적 생산비 문제 ▲전국 단위 산업 정책에서의 호남 소외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참석자들은 선거철마다 민주당을 지지해온 호남의 시·도민들이 어떤 변화를 체감했는지에 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으며, 민주당이 지역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성과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의 광주전남언론포럼 이사장은 "이번 간담회는 광주, 전남의 핵심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참석자들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정책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현안의 문제의식은 단순한 불만이 아닌 호남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절박한 과제"라며, "지역이 가진 주요 현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과 정책 및 법안 등이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남의 시·도민들이 선거 때마다 보여준 신뢰와 지지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시·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실질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는 지역 각계 전문가, 기관 및 단체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의견이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리해 12월 이내까지 정경래 당대표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광수 기자

정책 국감은 사라지고 전·현 정권 충돌만 남아... '스타'는 없고 고소·고발 난무
여야, 이재명·윤석열 정권 공격 정쟁 반복... 정책 검증 '실종'에 스타도 '실종'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정책 검증 대신 막말과 고소·고발이 수반된 정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여야가 이재명·윤석열 정권 관련 공방을 연일 주고받으면서 민생과 정책 검증이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는 사라지고 있다. 지지층을 겨냥한 의원들의 고성과 막말, 충돌이 빈발했지만 객관적인 검증과 날카로운 지적은 실종되면서 국정감사 '스타'는 나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격전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공격에 집중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건진법사 관봉권 피지 분실 사건 등을 부실 수사했다면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부각하는데도 주력했다.

국민의힘은 인사 개입, 경기동부연합 연계설, 휴대전화 교체설 등 각종 의혹을 매개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이슈를 부각했다. 또 미국과의 관세협상, 10·15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등을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혼선, 정부 인사들의 부도덕성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법사위는 국정감사가 열릴 때마다 여야의 충돌로 야당의 보이콧과 여당 소속 위원장의 감사 중지 선언, 의원 퇴장 명령, 발언권 제한 등 파행이 반복됐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대법원 국정감사에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일반 증인으로

단독 채택했고,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석을 불허한 채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강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잇단 질의에도 정면을 응시한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는 관례에 따른 마무리 발언에서 각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회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질의를 강행한 것은 '헌정 질서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야 한다"는 비판도 했다.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도 실시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은 직권남용이자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에 항의해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했고 "이재명 무죄 만들기를 위한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사법 파괴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정경래 민주당 대표는 추미애 위원장에 "국민의힘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형사 고발하러"고 했고,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거나 강제 퇴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추미애 방지법' 발의로 맞대응했다.

여야는 운영위원회 등 각 상임위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각종 의혹 등이 제기된 김현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김현지 부속실장을 부를 이유가 없다며 증인 채택에 협조하지 않았다. 다음달 6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도 김현지 부속실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서툰 걸음부터 느린 걸음까지

당신의 삶,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